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규제개혁 핵심사례 40선

알면 힘이되고
희망이 됩니다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 합동

목 차

규제개혁 핵심사례 40선

투자 활성화

01.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토지에 동일건물 연계건축 가능 (국토부, '14.4)
02. 산업단지 녹지 내 공장증설 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 이내 감면 (산업부, '14.8)
03. 관광·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보전산지 면적비율 초과 가능 (산림청, '14.9)
04. 산지에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산림청, '14.8)
05. 터미널·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국토부, '14.12 예정)
06.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국토부, '14.11)
07. 의약품, 해외 위탁제조 허용으로 시설투자 비용 절감 (식약처, '14.9)
08. 저비용 합판, 실외건축에 사용 가능토록 변경 (산림청, '14.4)
09.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가능 (환경부, '14.11)
10. 모든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고용부, '14.9)
11.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 (국토부, '14.10)
12. 공익용 산지에도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산림청, '14.12)

신산업 창출

13.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고 제외 (식약처, '14.8)
14. 제3국 간의 특송물품, 국내 반입 후 저렴한 국제우편으로 환적 가능 (관세청, '14.5)
15. 주유소 부대시설에 허용되는 점포 확대로 주유업계 활성화 (안전처, '14.6)
16.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으로 튜닝산업 활성화 (국토부, '14.6)
17. 한글·영문, 출원서식 간편화로 특허출원 시일 단축 (특허청, '15.1 시행)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18. 창업기업의 공장 증설 시 부담금 감면 (중기청, '14.6)
19.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이용을 통한 가치 재창출 (문체부, '14.7)
20. 소규모 식품가공업 허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 (농식품부, '14.9)
21. 상수원 상류에 떡·한과·커피 공장 허용 (환경부, '14.12)
22.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고용부, '14.4)
23.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고용부·법무부 한곳에만 신고 가능 (고용부·법무부, '14.10)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24.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위, '14.12 예정)
25. 빵·떡 등 즉석제조 식품 택배배달 공식 허용 (식약처, '14.10)
26. 개별포장 안 해도 생닭 판매 가능 (식약처, '14.10)
27. 휴일 예비군 훈련 인원 확대 (국방부, '14.1)
28.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억울한 과징금 1/2 감경 (여가부, '14.10)
29. 창문·입간판·차량뒷면 등 옥외광고 활성화 (행자부, '14.9)

국민 불편 개선

30. 추가합격한 대학 등록금도 대출 가능 (교육부, '14.1)
31. 부녀자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국세청, '14.2)
32.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 (고용부, '14.6)
33. 국내에서 영어 등 외국어 어학연수 가능 (교육부·법무부, '14.5)
34.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제 가능 (금융위, '14.8)
35.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국토부, '14.5)

안전한 사회 구축

36.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환경부, '15.1 시행)
37.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배상조치액을 늘려 적절한 피해보상 가능 (원안위, '14.12)
38.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폰 불법사용 방지 (미래부, '14.2)
39. 승객 안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 (국토부, '14.1)
40. 작업장 안전을 위해 사업장 내 대형문 설치 시 소형 수동문 허용 (고용부, '14.9)

규제개혁 핵심사례 40선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현장건의와 핵심규제 완화, 손톱밀가시, 규제신문고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된 규제개혁 성과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 사례 중 생활 속 체감이 높은 <핵심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부터 작지만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한 사례까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이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뀐 규제개선 사례를 만나보세요.

경제는 살고! 일자리는 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신바람 나는 대한민국을 규제개혁이 만들어 갑니다.

투자 활성화

입지·환경·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신규 투자 시장을 창출했으며
각종 부담금, 불필요한 기준·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01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토지에 동일건물 연계건축 가능

공장 증설이 쉬워져 일자리가 8,000개나 늘어나요!



개선
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이 구역 밖에
맞닿은 토지까지 걸쳐 있어선 안 됨

개선
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구역 밖에 맞닿은
토지의 소유권이 같고, 건축 용도가 같으면 구역을
넘어서는 동일 건축물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국토부, '14.4월)



시설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

- 화성시 S전자 7조원 규모 시설 투자,
8,000여명 일자리 창출 예상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9)

02

산업단지 녹지 내 공장증설 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 이내 감면

공장 넓히는데 부담이 확~ 줄었어요!



개선
전

산업단지 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할 경우,
용도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 50%와
대체 녹지 조성비를 이중으로 부담

개선
후

대체녹지 조성비를 지가차액의 50%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대체녹지 조성비를 지가차액 환수 시 공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산업부, '14.8월)



기업 부담 완화와 설비 투자 유도

- 여수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572억원 부담 완화,
기업 설비투자 2조6,600억원 유도 예상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4)

03

관광·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보전산지 면적비율 초과 가능

우리 동네 뒷산이 명품 관광단지가 된다고요?



개선
전

산지에 관광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일정 규모 (지자체 보전산지 비율) 이상으로는 대규모 개발이 불가

개선
후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전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산지에서의 대규모 관광·산업단지 개발을 허용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 '14.9월)



보전산지 내 관광 및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로 투자 확대 기대

문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04

산지에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대규모 풍력발전 건설로 경제,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다!



개선
전

산지에 설치 가능한 풍력발전시설 면적이 3만㎡ 미만으로 제한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 별도 기준이 없어 '임도시설의 타당성 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 적용

개선
후

풍력발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을 10만㎡ 이하로 완화해 대규모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 별도의 기준 마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 '14.8월)



태백·의령·양산지역의 풍력단지 개발사업 재개로
약 1,500~2,250억원의 투자효과 예상

문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8)

05

터미널·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진정한 멀티플렉스란 이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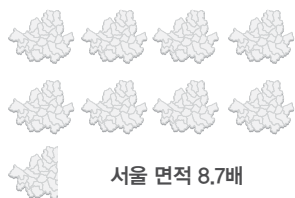
개선
전

터미널, 도서관, 종합운동장 등의 기반시설 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매점, 화장실 등
제한적인 편의시설만 설치가 가능

개선
후

기반시설 내 소극장 · 어린이집 · 생활체육시설, 상점,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 설치를 허용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법제심사 중
(국토부, '14.12월 예정)



서울 면적 8.7배

전국 5,300km²(서울면적 8.7배)
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기대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06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거리제한 완화

도로변 규제 풀리니 '여의도 18배' 공간이 살아났어요!



개선
전

고속도로변과 도로변에 일정 너비의 접도구역을
지정해 건축을 제한
(고속도로 20m, 국도·지방도·군도 5m)

개선
후

고속도로변의 접도구역 폭을 10m로 축소하고
군·도 지역의 접도구역을 폐지해
도로변에서의 건축물 증·개축이 가능

• '도로법 시행령'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 (국토부, '14.11월)



X 18

여의도 면적의 18배(51.76km²)에 상당하는
도로변 토지 이용이 활성화

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0)

07

의약품, 해외 위탁제조 허용으로 시설투자 비용 절감

공장 없는 제약회사, 글로벌 경쟁력이 자라는 요람이에요.



개선
전

국내제조업체 간 의약품 위탁제조만 허용

개선
후

특수설비가 필요하거나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특수제형 의약품에 대해
해외 위탁제조전문기업을 통한 제조를 허용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 (식약처, '14.9월)



글로벌 의약품 기술을
초기 시설투자(200~1,500억원)
부담 없이 상용화 가능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20)

08

저비용 합판, 실외건축에 사용 가능토록 변경

저비용 합판 사용 허가로 건축·포장업계 비용이 줄었어요!



개선
전

국내 합판 유통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저비용
합판(E2)이 법적으로 유통 금지
각 장의 앞·뒷면에만 합판 품질표시를 할 수 있어
묶음 포장된 합판을 일일이 풀어야 하는 불편 발생

개선
후

저비용 합판(E2)의 실외 사용 허가
합판의 옆면에도 품질표시가 가능해져 업계 비용 절감
• '합판 규격·품질 기준 고시' 개정 (산림청, '14.4월)



건설업계 및 수출 포장업계,
연 5,894억원 부담 경감 예상

문의 : 산림청 목재생산과 (042-481-4204)

09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가능

규제개혁, 탄산수 시장을 톡~ 쏜다!



개선
전

먹는샘물 제조공장에는 먹는샘물 외에
다른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탄산수 생산이 불가능

개선
후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탄산수 생산 시설을 허용해
탄산수 생산 가능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14.11월)



탄산수 생산의지가 있는 먹는샘물
기업(21개)의 연계투자 기회 제공으로
420억원의 신규 투자 유도

문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8)

10

모든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카드로 냅니다!



개선
전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부재

•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회사의
채납보험료의 경우에만 허용

개선
후

모든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고용부, '14.9월)



기업의 일시적 자금운용 애로개선 및
보험료 카드납부 200억원* 예상

* (추정) 고용·산재보험 납부총액 1조원,
신용카드 납부를 2% 가정시 200억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1)

11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 허용 및 건폐율 완화

좁은 공장 넓히니,
답답한 속이 시원하게 풀리네요!



개선
전

녹지·관리지역 내 공장 증축을 제한 (건폐율 20%)

개선
후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들어섰던 공장은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토부, '14.10월)



녹지·관리지역 내 4,000여개
기존 공장 시설 투자 시,
약 7,000억원 투자유발 예상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12

공익용 산지에도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중복규제 폐지하니
지역 관광 살아나네!



개선
전

공익용 산지에 관광·휴양시설 설치 불가

개선
후

공익용 산지에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정 (산림청, '14.12월)



과도한 중복규제 폐지로
지역 투자·경제 활성화에 기여

• 양양국제공항주변 민자 유치사업 : 665억원 투자 유치,
500여명 고용효과 예상

문의 :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1)

신산업 창출

신기술 상용화 등 새로운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었던
진입 · 업종 · 절차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지원했습니다.

13

스마트 의료기기, 의료기기 신고 제외

나의 건강, 이젠 스마트폰으로 챙겨요!



개선
전

스마트폰에 운동·레저용 심(맥)박수계를 탑재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함

모바일 의료용 앱을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필수

개선
후

운동·레저용 심(맥)박수계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별도 허가 없이도 제품 출시 가능

모바일 의료용 앱과 이를 탑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면제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 '14.4월)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 '14.8월)



조기 시장 진입 및 스마트폰 수출 증진으로
국익 창출

- 통신기기 및 가전제품 소매점 약 4만451개소('12년 기준),
별도 신고 없이 판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06)

14

제3국 간의 특송물품, 국내 반입 후 저렴한 국제우편으로 환적 가능

대한민국, 특송물품 물류허브로 거듭나요!



개선
전

공항으로 들어온 제 3국행 특송화물을 국제우편으로 옮겨 실을 수 있는 시스템 미비

개선
후

통관시스템을 새로 갖춰 제 3국간 거래되는 특송화물을 공항으로 반입한 후 우리나라 국제우편(EMS)으로 바꿔 보낼 수 있게 됨

• EMS 환적물품 시범운영 (관세청, '14.5월)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및
신 부가가치를 창출, 고용창출 효과 확대

• 환적 물류 신규 유치를 통한 연간 3,6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

문의 :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

15

주유소 부대시설에 허용되는 점포 확대로 주유업계 활성화

주유소에서 완성하는 헤어스타일! 놀랍지 않나요?



개선
전

주유소 내 물품 판매·대여업, 중개업 부대시설만 입점 가능
주유소 부대시설은 1층에만 입점
면적 500㎡까지 제한

개선
후

이·미용실, 운동시설, 피부관리실 등 주유소 내에
입점할 수 있는 부대시설 업종 확대

전 층에 부대시설 입점 가능
면적 1,000㎡까지 확대

• '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 범위에 대한 업무지침' 개정 (안전처, '14.4월)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처, '14.6월)



주유소 경영 적자 해소 및
주유업계 경제 활성화 기여

• 약 1만3,000개의 주유취급소가 부대시설 활용을 통해
약 150억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

문의 :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 (02-2100-0866)

16

까다로운 자동차 튜닝규제 개선으로 튜닝산업 활성화

자동차 튜닝 산업! 힘차게 달립니다!



개선 전

엄격한 튜닝규제 탓에 튜닝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개선 후

금지 대상이던 캠핑카, 푸드트럭의 구조변경 허용

전조등을 제외한 방향지시등과 안개등 등의
자동차 등화장치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튜닝 가능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부, '14.6월)



튜닝시장 규모 확대,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튜닝 시장 및 일자리 규모는 '12년 5,000억원(1만명)에서
'17년 2조7,000억원(2만명), '20년 4조원(4만명)으로
확대 전망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2)

17

한글·영문, 출원서식 간편화로 특허출원 시일 단축

소중한 내 아이디어! 쉽고 빨라진 특허로 지켜요!



개선 전

발명명세서를 작성해야만 특허출원 가능
특허출원 서류는 국어로만 작성 가능

개선 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와 같이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출원 가능

특허출원 서류 작성이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가능해져 교수, 연구원들이 빠르게 특허출원을 진행

• '특허법' 개정 (특허청, '14.6월 공포, '15.1월 시행)



쉽고 빠른 특허출원으로
국내·외 특허 획득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제조업 총생산액이 연 140억원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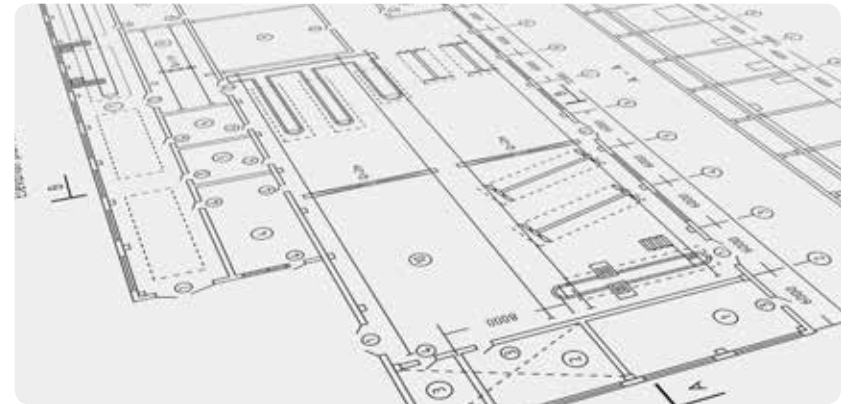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042-481-5397)

18

창업 '7년차'지만, 처음처럼~

창업·중소기업 활력 제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기술·입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창업 환경과 중소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선
전

공장을 처음 설립하는 창업기업만이 부담금 면제 대상

개선
후

7년 이내의 창업자가 공장증설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허용해 공장 증설 시 부담금 면제

• '창업사업계획승인 통합업무처리지침' 개정 (중기청, '14.6월)



창업 5~7년차 기업 증설에 따른
부담금 약 245억원 면제

• 1,303업체가 약 245억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384)

19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이용을 통한 가치 재창출

비싼 저작물, 더 이상 고민 NO! 공공저작물이 있잖아요~



개선 전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했음

개선 후

공공누리마크가 표시된 공공기관의 저작물은 별도 절차 없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문체부, '14.7월)



공공저작물의 민간 이용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비용부담 절감 예상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2)

20

소규모 식품가공업 허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

농사만 짓는 농촌은 이젠 옛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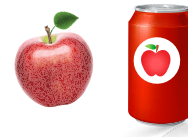
개선 전

농가의 소자본으로는 식품위생법의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식품가공업 창업이 힘들

개선 후

농가의 식품가공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설 기준* 완화

- *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식품 보관 용도로 사용 허용
공정 특성에 따라 내수성 재질 설비 예외 인정
식수용 탱크도 급수시설로 인정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를 위한 지자체 표준 조례·규칙(안)’ 배포 (농식품부, '14.9월)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채소 즙, 장아찌 등)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업 활성화로 향후
3년간 183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기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2)

21

상수원 상류에 떡·한과·커피 공장 허용

강가에 커피, 빵 향기가 솔솔~ 지역경제는 솔솔~



개선
전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선
모든 제조업의 공장설립 제한

개선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생계형 공장*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의 설립 허용

* ① 커피 가공업, ② 떡·빵류 제조업, ③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④ 면류제조업

• '수도법 시행령' 및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14.12월)



상수원 상류 거주주민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문의 : 환경부 정책총괄과 (044-201-7116)

22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 확대

작지만 강한 기업! 사람이 경쟁력이니까요!



개선
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

개선
후

문화콘텐츠, 지식기반서비스 등 유망분야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인턴 시행지침' 개정 (고용부, '14.4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참여 인턴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증대

• '14.10 기준, 5인 미만 중소기업 380개소에서
420명 청년채용 진행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지원과 (044-202-7446)

23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고용부·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 가능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한 번이면 OK!



개선
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개시신고를, 법무부에 취업개시신고를 각각 해야 함

개선
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전산시스템 연계로
한 곳에서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 간소화

•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 '14.9월), 시스템 개편 (고용부,
법무부, '14.10월)



기업 부담 완화와 민원 편의 증대

• '13년 기준 13만 5,000명의 고용주 혜택
신고 한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시
67억5,000만원 경제적 효과 기대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 (044-202-7147)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59)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금융·인력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
신바람 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24

매출 2~3억원 소상공인도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수수료 줄어드니 장사할 맛 납니다!



개선
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에만
우대수수료를 적용

개선
후

연매출 2~3억원 사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법제심사 중 (금융위, '14.12월 예정)



연매출 2~3억원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5,280여억원 부담 완화 예상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02-2156-9856)

25

빵·떡 등 즉석제조 식품 택배배달 공식 허용

전통시장 명물음식, 클릭 한 번에 우리 집까지!



개선
전

전통시장 빵집, 떡집, 참기름집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업소 내에서만 판매

개선
후

즉석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퀵서비스나
택배로 배달 판매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4.5월, '14.10월)



7만7,000여개 (*'13년 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체 소득 증대,
소비자 편의 증대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043-719-2011)

26

개별포장 안 해도 생닭 판매 가능

식파라치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어요!



개선
전

닭·오리의 식육은 도축장에서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해야 함

개선
후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가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닭·오리 식육의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 가능

- * 위생요건 : 냉장온도 유지가 가능하고 소비자가 식육을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의 개폐형 냉장진열상자, 식육 전면의 표지판 등을 이용한
표시, 식육에 직접 접촉하는 얼음 사용 금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4.10월)



전국 1,372개 전통시장에서
연 7억5,000만원 포장비용 절감 예상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043-719-3208)

27

휴일 예비군 훈련 인원 확대

예비군 훈련! 회사 눈치 안보고, 생계 걱정 없으니, 좋지 아니한가~



개선
전

휴일예비군 훈련 가능 인원을 2만5,000명 운영
특정 지역과 시기에 신청자가 몰려서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

개선
후

휴일예비군 훈련 가능 인원을 3만5,000명으로 확대

신청자가 많은 지역과 시기의 휴일 훈련 인원 비율 확대

- 2013년 휴일예비군 훈련계획 공고 (국방부, '13.1월)
- 2014년 휴일예비군 훈련계획 공고 (국방부, '14.1월)



평일에 훈련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대한 부담 경감 ('12년 대비 51.8% 증가)

문의 :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5)

28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억울한 과징금 1/2 감경

청소년유해업소 억울한 과징금, 반으로 줄었어요!



개선
전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인 사실과 관계없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

개선
후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한 경우
과징금과 영업정지 기간이 1/2로 줄어듦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청소년유해업소 위반행위
행정처분 감경지침’ 제정 (여가부, '14.10월)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경감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02-2100-6293)

29

창문·입간판·차량뒷면 등 옥외광고 활성화

광고면적 늘어나니 전화기에 불 납니다!



개선
전

법령과 상관없는 지자체 조례로 창문 광고 및
입간판 설치 금지
자동차·화물차의 옆면 1/2만 광고면적으로 활용 가능

개선
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창문 이용 광고 및
입간판 설치 가능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옆면 1/2과
뒷면 1/2까지 확대

• 시·도 광고물담당 회의 개최, 내용 전파 및 재발방지 안내 (행자부, '14.9월)



자영업자 애로 해소,
광고물 산업의 활성화 기대

문의 :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 (02-2100-1765)

국민 불편 개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불합리한 수수료를 개선하여
가계 살림을 풍요롭게 하고
국민의 삶이 보다 편해지도록 지원했습니다.

30

추가합격한 대학 등록금도 대출 가능

학자금 중복 대출? 신입생이라면 OK!



신입생 및 재학생 학자금 중복 대출 불가

개선 전

학자금 중복 대출 금지로 인해 신입생이 추가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 다시 대출 불가

신입생에 한해 학자금 중복 대출 가능

개선 후

신입생의 경우, 1차 합격 대학에 납부한 대출금이 반환되지 않아도 추가 합격 대학 등록금 대출 가능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공포 (교육부, '14.1월)



연 3,000여명의 학교이동 대출자의 등록금
추가 마련 부담 해소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271)

31

부녀자 소득공제 받아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저소득 여성 지원 쏙쏙~ 일할 맛이 팍팍!



개선
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녀자 공제를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개선
후

부녀자공제로 절감된 세금 액수를 차감한 뒤
근로장려금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국세청, '14.2월)



저소득층 지원 확대

• 약 7만7,000명, 800억원 수혜 추정

문의 : 국세청 소득지원과 (02-398-6116)

32

국가기술자격시험 무료 발급

합격해서 좋고, 수수료 없어 더 좋고!



개선
전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1,000원

개선
후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무료 발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부, '14.6월)



연 18만여건의 발급 수수료
(약 1억8,000만원) 면제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0)

33

국내에서 영어 등 외국어 어학연수 가능

미국보다 미국 같은 어학캠프, 우리 동네에 있어요!



개선
전

초·중학생 대상, 학교 시설 내 어학캠프 운영 금지
외국인 유학생들은 국내 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만 가능

개선
후

방학 중 학교시설 내 어학캠프 운영이 가능해져
사교육비 부담 완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영어 등 기타 언어 연수 가능
• ‘어학캠프 운영을 위한 MOU 체결 기준’ 마련 (교육부, '14.5월)
•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 (법무부, '14.4월)



국내 학생들의 유학비 지출 축소,
외화 유출 최소화.
중국 등 주변국의 어학연수 수요 국내 유입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80) /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7)

34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결제 가능

복잡한 절차로 사람 잡는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OUT!



개선
전

온라인으로 3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
온라인 카드 결제를 하려면 공인인증서, SMS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

개선
후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에도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본인여부 확인 없이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원클릭 시스템 구현
•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 '14.5월)
•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금융위, '14.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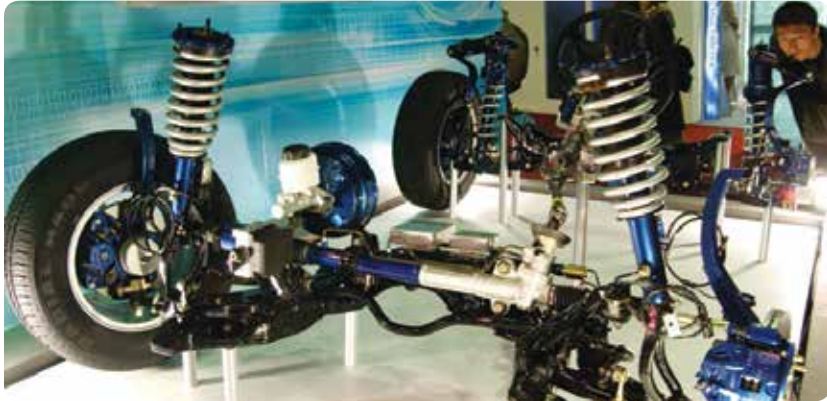
내·외국인들의 전자상거래
결제불편 해소 및 거래절차 간소화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6)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56-9493)

35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부품가격 미리 확인하니 바가지 쓸 걱정 없어요!



개선
전

자동차 부품 가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 사례 발생

개선
후

부품제작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점검 및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 가격을 공개하고,
분기별로 자료를 갱신하도록 의무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부, '14.5월)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및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2)

안전한 사회 구축

공공시설,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36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은 기본, 늘어나는 일자리는 덤으로~



개선 전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

개선 후

정부합동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

- * 노후시설 개보수 용자·보조 사업,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지원, 중소기업체 방문교육·컨설팅, 집중기술지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환경부, '15.1월 시행)



화학물질 안전관리설비 투자 활성화로
비용편익 발생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17년까지 안전설비 투자펀드 5조원 지원 예정

문의 : 환경부 화학물질과 (02-6050-1303)

37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배상조치액을 늘려 적절한 피해보상 가능

원전의 안전 책임감이 커졌어요!



개선 전

발전용원자로 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500억원으로 규정

- * 배상조치액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금액,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 공탁금액

개선 후

발전용원자로 사업자의 배상조치액을 5,000억원으로
올려서 원전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 확대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 (원안위, '14.12월)



원전사업자의 재정적 담보 능력 확보로
원자력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가능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02-397-7357)

38

분실·도난 신고 된 휴대폰의 불법사용 방지

잃어버린 휴대폰, 나쁜 일에 쓰일까봐 걱정하세요?



개선
전

분실·도난 휴대폰 정보가 이동통신사 간에 공유되지 않아
휴대전화의 불법적 사용 가능성이 컸음

개선
후

모든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분실·도난 신고 된 휴대폰 정보를 공유하게 돼
분실·도난 단말기 유통을 차단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미래부, '14.2월)



휴대전화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와 (02-2110-1939)

39

승객 안전 위해 지하철 등 도시철도차량 내 CCTV 설치

지하철, 안심하고 타세요. 24시간 여러분을 지켜 드립니다.



개선
전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 차량은 CCTV 설치
의무 대상 아님

개선
후

신규 구매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의무화
• ‘도시철도법’ 개정 (국토부, '14.1월)



21개 노선, 하루 89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예방

문의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044-201-3959)

40

작업장 안전을 위해, 사업장 내 대형문 설치 시 소형 수동문 허용

큰 문은 편하게 자동으로, 작은 문은 안전하게 수동으로!



개선
전

동력으로 작동되는 대형문을 설치하는 경우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설치

개선
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소형문을 설치해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고용부, '14.9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수동 설비 구축 비용 절감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4)

규제개혁은 계속 됩니다!
추가 제안이나 문의사항은 연락주시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02-6050-3366
규제개혁신문고 www.better.go.kr

규제개혁 핵심사례 40선

알면 힘이되고 희망이 됩니다

발행일 2014년 12월 23일

펴낸곳 국무조정실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8호

전 화 044-200-2407

팩 스 044-200-2448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국무조정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획 · 디자인 커런트코리아 www.currentkorea.co.kr (02-3210-2770)